PART 05



국제 농업 정보

1.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1.3% 하락
2. 이탈리아, 모든 토마토제품에 원산지의무표시 도입 계획
3. 아일랜드, 가당음료에 설탕세 부과 계획
4. 덴마크, 동물복지표시제 확대 계획
5. 미국-일본, 쇠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사전 협의
6. 베트남,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확대

국제 농업 정보 (2017. 9.)

유럽

*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1.3% 하락
* 이탈리아, 모든 토마토제품에 원산지의무표시 도입 계획
* 아일랜드, 가당음료에 설탕세 부과 계획
* 덴마크, 동물복지표시제 확대 계획



아시아

* 미국-일본, 쇠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사전 협의
* 베트남,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확대

8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1.3% 하락

8월 세계식량가격지수 1.3% 하락

- 곡물 수확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곡물 재고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8월 세계 식량가격은 전월대비 1.3% 하락함.
-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(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, FAO) 식량가격지수(Food Price Index, FPI)는 176.6으로 8월 한 달 동안 약 5.4% 하락하여 곡물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함.
- 2개월간 가격 상승을 겪은 월별 하락은 주로 밀 가격 급락에 기인함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대비보다 6%(10포인트) 높음.
- 곡물가격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이후 7월(162.2포인트)에서 5.4% 하락한 153.4포인트를 기록함.
  - 특히 흑해지역의 수출업체들 사이에서 생산전망이 개선되어 월별로 밀 가격이 8% 이상 하락함.
  - 국제 쌀 가격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는데, 이는 느린 수입수요가 새로운 작물 생산에 앞서 이용가능성 감소로 인한 공급을 상쇄하였기 때문임.
- 설탕가격도 지난 3월(2.1%)에 비해 1.7%(3.6포인트) 하락한 203.9를 기록함.
- 연초 이후 하방압력이 계속되고 있으며, 8월 육류가격 또한 1.2%(2.1포인트) 하락함.
  - 쇠고기가격은 하락한 반면, 양, 돼지, 가금육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함.

유제품, 식물성 유지 가격 상승

- 유제품 가격은 1.4%(3.19포인트) 증가한 219.7포인트를 기록하였으며, 식물성유지 가격은 2.5%(4.1포인트)증가한 164.4포인트를 기록함.
- 유제품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42%(65포인트) 상승했으나, 2014년 2월 최고기록보다는 20% 낮음.

❍ 8월 버터와 전지분유(whole milk powder, WMP) 가격은 상승함.

- 이는 유럽과 북미지역에서의 유지방(butterfat) 수요 증가로 수출가능성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.

❍ 이와 대조적으로 탈지분유(skimmed milk powder, SMP)가격은 수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방압력을 받음.

- 반면 세계 치즈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함.

❍ 식물성 유지가격 상승에는 동남아시아의 예상보다 낮은 생산량으로 인한 팜유 및 주요 유지류 가격 상승추세와 꾸준한 수입수요가 반영됨.

※자료: Agra Europe (2017.09.11.)

이탈리아, 모든 토마토제품에 원산지의무표시 도입 계획

❍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(Maurizio Martina)은 passata(토마토 퓨레)에 적용되는 기존 라벨링제도를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토마토 기반 제품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밝힘.

- 이는 이탈리아가 파스타의 쌀과 듀럼밀(durum wheat)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규정을 채택한 직후 발표된 것임.

❍ Martina는 우유, 파스타, 쌀과 같은 원재료의 원산지 의무표시를 토마토 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발전부 장관(Carlo Calenda)과 협력하고 있다고 함.

- 이탈리아 최대 농업조직인 Coldiretti를 포함한 농민단체들과 관련 산업계 등은 이를 환영하며 원산지 의무표시화 제안서에 모든 가공채소 및 과일이 포함되도록 요청함.

❍ Coldiretti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일부 토마토 가공업체의 수입 토마토 페이스트를 재포장하고 원산지를 기존 EU 라벨링 규정에 따라 이탈리아로 표기('Made in Italy')하여 판매하는 캠페인을 시작함.

- Coldiretti는 가공제품이 아닌 신선 육류와 채소의 원산지표시를 요구하는 EU의 불확실한 태도를 비판하였음.

❍ 이탈리아 규정은 현재 파사타(passata)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껍질을 벗긴 토마토, 펄프(pulp; 토마토를 부드럽게 으깨어서 만든 걸쭉한 것), 페이스트(paste), 소스류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.

- 이탈리아는 2016년 중국에서 토마토 페이스트를 9만 1,000톤 수입함. 아는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신선 토마토의 약 20%에 해당하는 물량임.

❍ OI Pomodoro 회장 Tiberio Rabboni는 토마토의 원산지가 표시되면 이탈리아 제품의 명성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라벨링 문구를 제안함.

※자료: IEG policy(2017.09.08.)

아일랜드, 가당음료에 설탕세 부과 계획

청량음료업계, 설탕세 부과 반대

❍ 아일랜드 정부는 10월 예산안 발표에서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.
- 설탕세는 2018년 4월 이후부터 부과될 예정임.
- 청량음료산업계는 이에 반대하며 아일랜드 재무부장관(Pascal Donohoe)에게 설탕세 부과 조치를 연기하라고 촉구함.

❍ 아일랜드 청량음료업계를 대표하는 음료위원회(Irish Beverage Council)는 브렉시트(Brexit) 이후 불확실성, 생산 비용 증가, 새로운 소비세 부과 등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함.
- 설탕이 들어간 청량음료 판매량의 11%가 국경 간 판매, 비공식적인 암시장 등에서 손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- 설탕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경우 세금은 4,000만 유로 증가하는 반면 3,000만 유로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임.
- 또한 재무부가 지난 34개월 동안 세금을 다섯 차례 이상 인상하였으며, 이에 세금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함.

❍ 또한 아일랜드 전체 청량음료의 공급 및 생산시스템의 통합성을 감안할 때 브렉시트는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대한 세금부과에 중대한 도전과제임.
- 설탕세 부과에 따른 재무부의 손실과 세금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설득력 있고 공정한 세금 설계를 할 수 없음.
- 따라서 유일한 논리적인 단계는 청량음료에 대한 설탕세 부과 계획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함.

❍ 아일랜드 음료위원회는 아동 비만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, 세계보건기구(World Health Organization, WHO)에 따르면 11~15세 어린이의 설탕이 들어간 청량음료의 하루 소비량은 2002~2014년 동안 70%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함.

- 또한 청량음료의 설탕 함유량이 줄어들고 있으며, 설탕이 함유된 음료를 매일 마시는 어린이 수가 감소하면서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이 완전히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힘.

❑ 아동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설탕세 찬성

❍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부과는 아동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법의 일부분으로서 WHO에 의해 권장된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아니 됨.

- 심혈관건강증진 비영리단체 Irish Heart의 정책관(Kathryn Reilly)은 청량음료업계가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의 통계자료를 설탕세 부과를 반대하는 근거로 인용하는 것을 지적함.
-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는 아동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조치로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재정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임.
- 세금부과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나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다른 조치들과 결합될 경우 잠재적으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.

❍ 또한 재무부 장관이 세금 수입의 일부를 아동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것을 희망한다고 함.

- 특히 어린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수익의 일부분을 배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세금 부과에 따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함.
- 설탕세 부과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크푸드 마케팅, 학교의 음료 자동판매기에 대한 금지 등의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함.

※자료: IEG policy(2017.09.06.)

덴마크, 동물복지표시제 확대 계획

❍ 덴마크 정부는 자발적 동물복지표시제 대상으로 돼지고기가 함유된 제품을 포함하는 계획을 발표함.

❍ 덴마크 정부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동물복지 관련 라벨링제도는 3단계의 복지수준을 설정하여 표시하도록 함.

-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나은 복지수준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.
- 또한 도살용 돼지를 공급하는 농부들은 복지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동물복지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.

❍ 덴마크 정부는 EU집행위원회의 동물복지표시제 관련 규정에서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제품에도 동물복지표시제를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함

❍ 초안에는 돼지고기에 대한 동물복지표시는 돼지고기가 육류제품의 최소 75%이상을 차지하고, 다른 동물성 성분은 유기농 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규정하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됨. 그러나 젤라틴, 콜라겐 등은 유기농일 필요가 없음.

❍ 덴마크 정부는 동물복지표시제를 돼지고기 제품으로 확대하는 계획의 목적은 동물복지제표시를 확대하여 마케팅 기회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임.

❍ 덴마크는 동물복지표시제 적용을 돼지고기제품부터 시작하여 다른 육류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.

❍ 육류생산자 및 관련업계 단체는 2016년부터 도입된 동 계획을 환영하였으나, 소비자 및 동물복지단체들은 의무적인 EU라벨링 규정이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함.

- 유럽동물단체(Eurogroup for Animals)는 다양한 국가적 또는 자발적 계획을 보유하기보다는 EU블록에서 판매되는 모든 육류 및 유제품에 대해 EU동물복지표시 의무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함.

※자료: IEG policy(2017.09.08.)

미국-일본, 쇠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사전 협의

미국-일본, 2차 경제대화 전 비공식 회담 진행

❍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(아소 다로, 麻生太郎)은 9월 4일부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부통령(Mike Pence)과 비공식 회담을 진행할 예정임.

- 이번 워싱턴 방문은 10월 개최 예정인 두 번째 미일 경제대화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.

❍ 지난 4월 개최된 미일 경제대화 1차 회의에서 무역 및 투자 규칙, 거시경제 정책, 경제협력 등 3개 분야에서 협상할 것을 확인함.

- 미일 경제대화 2차 회의는 일본의 아소 재무상이 미국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분야별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.
-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자동차부문과 농업부문의 지원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음.

일본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논의

❍ 미국은 일본 정부가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발동한 긴급수입제한조치(safeguard measures)에 불만을 표명하고 일본에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.

- 일본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함에 따라 해당 관세율은 기존 38.5%에서 내년 3월 말까지 50%로 높아짐.
- 일본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시키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임.
- 이에 미국 농무부장관(Sonny Perdue)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, 농산품 무역을 둘러싸고 양국 간 통산관계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힘.

❍ 일본 농림수산 장관(齋藤健, 사이토 켄)은 8월 29일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쇠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의연한 태도를 강조함.

- 쇠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과거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50%에서 38.5%로 자발적으로 인하하였을 때 미국과 일본 정부 간 합의한 조치임.

❍ 미국은 일본으로의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할 수도 있음.

-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과의 통상과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의 재협상이나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으로 당분간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있음.
- 한편 미국의 농업단체 등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FTA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미국이 향후 협상을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
❍ 그러나 일본 농림수산 장관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FTA협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고 강조함.

※자료: 일본농업신문(日本農業新聞) (2017.08.30.)

베트남,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확대

❍ 베트남에서는 식료품 구매 시 농약의 사용 여부, 식품첨가물 유무 등 식품의 안전성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음.

-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의식 개선으로 최근에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,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안전식료품점 체인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.
- 베트남의 안전 식료품점은 주로 하노이 시내와 그 주변 중심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나, 향후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지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.

❍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따로 취급 및 진열하는 점포가 확대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.

❍ 베트남 식품기업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식품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,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차별화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음.

- 철저한 자사 농장관리를 통한 품질관리를 진행함.
- 생산자 및 재배기술의 정보를 QR코드화하여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.

❍ 최근에는 오프라인 판매와 더불어 온라인을 통해 안전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증가하는 추세임.

-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, 입소문을 통한 구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.

❍ 일본은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베트남에 선진 농업기술 제휴 및 농기계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음. 또한 베트남에서 재배되지 않는 온대기후 농산물 등을 고려하고 있음.

※자료: JETRO (2017.08.25.)

자료 작성 : 홍예선 연구원